

종합·해설



국회의원 수일 장안 재선거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시장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시민들에게 박찬숙 후보 지지 호소하고 있다. 박 후보의 오른쪽은 농수산부 장관 박찬숙씨.(왼쪽) 27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북수원농협 앞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이찬열 후보가 기호 2번 지지를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일 YS “귀국후 동교-상도동 모임”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27일 지난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추진했던 동교동계와 상도동계 인사 식사 모임과 관련, “이번에 방일을 마치고 돌아 가면 그 모임을 하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와세다(早稻田)대 초청으로 방일 중인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와세다대학 오노(小野)기념관에서 가진 '54년만의 일본의 정권 교체에 대해'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 및 학생들과의 문답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김대중씨와 나는 40년을 같이 민주화를 위해 공동으로 싸웠으나 결국 하나가 되지 못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후) 동교동계 40명과 상도동계 40명을 초대해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동교동계 대표들이 '49제가 남았다'며 연기를 요청했다”고 당시 모임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전에 입원 중인 병실을 찾았던 것에 대해 “김대중씨는 나보다 5살이 많다. 마지막 죽는 마당에 화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병실을 찾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 “이 대통령은 (경선 과정에서) 내가 적극 지지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그렇다. 이 대통령이 앞으로 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필요하면 충고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남북 정상 회담과 관련, 김 전 대통령은 “1994년 내가 대통령을 할 때 김 일성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있었다”며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정상회담 2주 전에 이 사람이 급히 죽어서 이뤄지지 못했다. 그때 만났으면 한국의 역사가 크게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비용 21억원

지난 8월18일 서거해 국장(國葬)으로 치러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비용 국고지원액이 안장식 비용 등을 제외하고 약 21억원으로 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김 전 대통령 장례비용 20억9천여만원을 올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를 통해 27일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8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치러진 국장 영결식 비용과 운구를 비롯한 각종 행사비용을 포함해 6일간의 장의 기간에 이 같은 비용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연환영 안장식 비용과 지방자치단체의 분할소 운영 비용은 국방부와 각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번 국고지원액에서 제외됐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5월23일 서거해 국민장으로 치러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비용으로는 모두 29억5천79만5천원을 국고에서 지원했다.

/연합뉴스

오늘 재보선... 광주·전남 선거 없지만 초긴장

10·2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가 지도부의 진퇴 등 민주당 내부의 역학구조 형성에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공천 구도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는 정세균 대표 체제의 지속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섯 곳의 재보궐 선거 지역 가운데 민주당이 한 곳에서만 이기거나 전패한다면 지도부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자연스럽게 조기 전당대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두 곳에서 승리한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비주류 등 일각에서는 책임론을 내세우며 당의 쇄신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주류 측에서는 나름대로 선전했다며 현 체제 유지에 나서면서 당내

결과 따라 민주당 지도부 체제 변화

내년 지방선거 구도·공천 방식 영향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세 곳이나 그 이상 승리한다면 이번 재보궐 선거는 민주당의 완승으로 평가되고 정세균 대표 체제는 더욱 강화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이처럼 재보궐 선거 결과가 민주당 지도부의 진퇴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성향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공천 방식과 공천 구도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구 민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들은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가 가져올 당내 역학구조 변화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의 민주당 지도부 구조로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계산 때문이다.

실제로 정세균 대표는 지난 9월 광주를 방문, “호남에서는 신망과 능력 있는 인재영입에 나서겠다”고 밝혔었고 강기정 대표 비서실장 등도 공개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물갈이’를 거론한 바 있다.

광주지역 구 민주당 출신 지방의원은 “현재의 당 지도부는 구 민주당 출신에게 그리 우호

적인 것 같지는 않다”며 “이에 따라 이번 재보궐 선거가 당내 역학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중인 입지자들도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른 지도부 체제의 변화는 곧 공천 구도의 변화로 이어지며 이는 공천 확보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는 무소속 정동영 의원 및 손학규 전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지역 정치권 인사들의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동영 의원의 경우, 재보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 입당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손학규 전 대표도 수원 장안 지역 구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재보선 판세 분석

10·28 재·보선을 하루 앞둔 27일 정치권은 강릉을 제외한 모든 선거구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수원 장안의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투표함을 열어봐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초박빙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 이찬열 후보가 손학규 전 대표의 지원을 등에 업고 맹추격,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에 1~2%포인트까지 접근한 데까지는 양당 모두 인정하는 상황. 하지만, 이후 민주당은 역전할 것으로, 한나라당은 역전까지는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고점지지층의 선거 참여도와 전체적인 선거율이 두 후보 간 승패를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선거구 내에 있는 성균관대 기숙사의 학생 3천800여명의 투표 성향과 투표율도 선거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학생이 주민등록을 기숙사로 옮긴 상황일 뿐 아니라 대학 강당에 ‘울진동 제8투표소’를 운영하기로 해 투표율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안산 상록동의 경우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지는 곳. 민주당은 자체 분석 결과, 김영환 후보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나라

당은 이 지역을 ‘백중열세’로 자체 분류했으나 안산시장 출신인 송진섭 후보가 선거운동 막판 야권 후보단일화 무산에 따른 야권성향 지지층의 표 갈림 때문에 어부지리할 가능성도 내다보며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

세종시 수정 논란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의 경우 한나라당은 경대수 후보가 맹추격, 초박빙의 접전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정범구 후보가 승기를 잡았다는 자체분석

을 내놓았다.

경남 양산에서 한나라당은 박희태 후보가 안정권에 접어들 것으로 자체 분류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 초반 한나라당의 텃밭인 탓에 승리를 기대하지 않았으나, 최근 역전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소속 후보를 내지 않고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강릉은 한나라당이 확실한 안정권에 분류하는 지역이다. 야당에서도 같은 반응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초박빙 수원 이겨야 최종 승리”

한나라 “양산·강릉 낙관” 민주 “안산·충북 우세”

이만섭 “개헌 거의 불가능... 선거구제 개편 선결”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27일 정치권의 개헌 논란과 관련, 개헌보다는 선거구제 개편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장은 이날 오후 연세대 행정대학원 최고위 정책과정 강연에 앞서 미리 배포한 ‘헌법개정 필요인가, 그리고 과연 헌법개정 가능한가’ 제목의 연설문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형 부정부패 유발 등 현행 헌법에 문제점은 있으나 현 정치상황으로 볼 때 개헌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실현가능성이 없는 개헌을 청와대나 여권이 자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국만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며 “여야간 완전합의가 있어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가능한데 지금은 여야 모두 당론 통일이 어렵고 국회에서의 여야 만장일치는 더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nbit Gosi Academy (한빛고시학원) featuring a large banner for the 2010 civil servant exam preparation. The banner includes the text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을 통하라!!' and '2010년 신바람 나는 공무원 합격준비는 지금부터 한빛에서'. Below the banner are several smaller boxes detailing course offerings such as '79회 공무원 합격의 힘!', '단과합격특강', and '야간반' (night classes) with specific course detail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academy.